

철학적 담론과 정치적 현실주의:

글로벌 서구

20세기의 유산

스테판 호글 박사 저

한 철학자의 호소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검증되지 않은 번역

20세기 4분의 1이 지난 시점의 초판

목차

철학, 역사, 정치: 정치적 현실주의와 글로벌 서구	5
글로벌 서구: 보편적 주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	7
서구의 공리	18
에필로그: 다가올 25년을 위한 세 가지 격언	19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역사가 나에게 대해 무엇을 말하든, 역사가 내가 여러분의 최악의 두려움이 아닌 최고의 희망에 호소했고, 의심이 아닌 확신에 호소했음을 기록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은 여러분이 자유의 등불이 발걸음을 인도하고 기회의 팔이 길을 든든히 받쳐 주는 가운데 앞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1911-2004)¹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바칩

¹ 1992년 8월 17일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 중에서.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당시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함께 광범위한 긴장 완화 과정을 주도했다.

냉소주의자들은 가치를 동등하고 수단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정치가들은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결정을 내린다. ... 나에게 있어 현실 정치(realpolitik)에 대한 합리적인 정의는, 외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객관적인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들이 직면한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그 운명을 다루려 하는 것은 현실 도피에 불과하다.¹

헨리 A. 키신저(1923-2023)

철학 – 역사 – 정치: 정치적 현실주의와 글로벌 서구

역사적 시대의 종말에 이르러 철학, 정치, 세계사가 20세기만큼 극적으로 얽혀 있었던 적은 드물며,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여파 속에 살고 있다. 20세기가 달력상으로는 끝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그 유산은 거의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수많은 정치적 갈등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다. 이는 수많은 긴장과 대립 구도가 형성된 세계 정치 무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현재 상황의 복잡성은 많은 동시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과거의 희망은 이미 오래전 체념의 감정으로 바뀌었다.

특히 국제 관계에서는 부정직한 야망에 이끌리지 않고, 개인적 책임감과 필요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즉 현실 정치를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현실 정치의 대가로 꼽히는 헨리 키신저가 위 인용문에서 말했듯이, 이것이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당면한 상황, 즉 현실에 따라 나아가는 조타수가 필요하다.

실제로 위험한 바다를 향해하려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배들, 자신의 잠재력, 그리고 잠재적 적들의 능력을 주시해야 한다. 선장은 관련성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과 실제 상황, 즉 현실적인 관점이다.

¹ 2009년 7월 5일자 잡지 『테어 슈피겔』(2009년 28호)과의 인터뷰에서.

그러나 그의 이상주의적인 마음은 바다의 지평선 너머를 과감히 응시한다 - 그의 가슴 속에는 두 영혼이 뛰고 있다².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속에서도, 그는 희망과 확신의 섬을 찾아 나선다. 달빛 아래, 선장은 평화와 우정의 노래를 흥얼거린다. 그의 마음을 울리는 세계적 형제애의 찬가들이다. 그러나 거친 바다의 폭풍이 섬세한 선율을 덮어버린다. 이상은 마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과연 모든 사람이 그 속에서 같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사실과 비전 사이의 대립 속에서, 노련한 선장들이 명심해야 할 전선들 사이에 제3의 차원이 등장했다. 바로 물속 깊은 곳의 조건들, 즉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 없이 존재하는 소용돌이와 해류들이다. 이는 물의 본질적 속성이 대규모로 드러난 현상이다. 강, 호수, 바다에서 물의 거동은 현실의 일부이며, 따라서 항해에 영향을 미친다.

깊이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사실 인간 본성, 즉 인간의 조건(*conditio humana*)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의 근본인 인간을 외면하고서 어떻게 정치의 본질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물론 실존적 질문들은 처음에는 철학적·신학적 영역을 지칭하며, 종종 개인적인 의미를 띤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 본성은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더 큰 세계관과 얽혀 있다. 하지만 만약 이 현실의 심연에서 고정된 상수를 형성하는 흐름들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흐름들이 따라서 실재한다면 어떨까?

이상주의적 이론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그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학적 논의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주의는 인간의 처지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즉, 근본적인 실존적 질문들을 분석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실의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리얼폴리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 저작은 바로 이러한 포괄적인 관점에 헌정된 것이다. *글로벌 서구(Global West)*는 그 뿌리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20세기 역사와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토대는 인간의 조건과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그 정치적, 특히 지정학적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향해 길을 제시한다. 개념적·실질적 분석을 통해 서구의 근본적 공리들에 도달하고, 진정한 리얼폴리틱이 미래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격언들을 열거한다.

² 키신저: „ 이상주의의 요소 없이는 현실주의도 없다.“

글로벌 서구 보편적 주권의 철학과 비전

대립과 수사

정치권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바로 ‘글로벌 서구’다. 이 용어 앞에는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에야 대중화된 두 가지 개념이 선행한다. 하나는 점점 더 심화되는 세계적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세계화’이며, 다른 하나는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보다 친근한 용어인 ‘글로벌 사우스’다.³

‘글로벌 웨스트’에 대한 논의는 21세기에 들어서야 서서히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정치, 특히 지정학적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는 대개 20세기 후반 동서 갈등이 지배적이었던 시절, 서구 세계 또는 서방으로 분류되었던 모든 국가들을 지칭한다. 서방 진영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헌법적 정부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산업화 국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동방에서 소련의 동맹국들과 대립했다. 유럽의 분단이 종식되자, 세계화 논의가 곧바로 제기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세계 무역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었다. 세상은 이제 지구촌이 되어 지구적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였다. 유엔(UN)과 같은 기구의 틀 안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국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다.⁴ 이에 따라 1990년대는 상대적인 긴장 완화(détente)의 시대가 되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글로벌 웨스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이는 대개 권위주의⁵ 및 전체주의 국가들이 펼치는 수사적 공격이다. 그들은 다른

³ 두 용어 모두 1950년대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1980년대까지는 드물게만 사용되었다. "글로벌 노스(Global North)"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⁴ 이 용어는 1963년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제커가 처음 사용했지만, 유럽의 민주화 물결이 일어난 후에야 인기를 얻게 되었다.

⁵ 비판적으로 볼 때, 이 용어는 권위주의적 양육을 연상시키는 완곡어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일정한 애정과 존중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되는, 강력하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동맹의 모습을 그려내려 한다. 이에 대항하는 것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야망을 지니고 있지만, 어쨌든 ‘글로벌 웨스트’의 일원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그 희생자로 여겨지는, 모호하게 정의된 국가 집단이다. 의문이 생길 때면 권위주의 국가들은 스스로를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시키거나 적어도 그들과의 연대를 선언한다.

이러한 가상의 세계적 대립 구도는 20세기에 산업화 국가와 개발도상국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던 남북 갈등을 연상시킨다. 불평등을 묘사하는 것 외에도, 초점은 항상 이러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맞춰졌으며, 이는 종종 산업화 국가들에게 귀속되었다.

오늘날 단지 세계 부의 분배 문제만 고려한다면, ‘글로벌 북(Global Nor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만, 이 용어조차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합할 뿐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으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성향의 국가들을 총칭하는 ‘글로벌 이스트(Global East)’라는 용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는 단순히 부의 문제만도 아니고, 냉전 시대의 이념적 유물 문제만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는 수사적으로 악마화된 서구의 대립 개념으로 기능하기 위해 고안된 어색한 용어이며, 따라서 가능한 한 모호하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졌다. 이는 구성 면에서 결코 동질적이지는 않지만 서구와의 차이를 옹호하고 종종 자신들을 더 나은 대안으로 제시하려 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축을 가리킨다.⁶

지리와 역사

오늘날 서구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는 거리가 먼 이 용어의 개념적 기원은 주로 유럽 중심적 지도학에 있으며, 이는 서구와 동양에 대한 담론 또한 형성했다. 동양—해 뜨는 땅—은 해가 다시 지는 서구와 대조된다⁷. 서양이 대서양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신대륙 발견 이후 미국에서 끝나지는 의견의 문제일 수 있으며, 동양이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먼 일본에 위치하는지도 마찬가지다. 궁극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지점은

깃뺨는 독재 정권을 지칭하는 ‘권위주의적’이라는 용어는 내용 면에서 명백한 광범위한 *정치적 올바름*에 기인한다.

⁶ 중요한 정치 용어들도 경쟁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2021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Democracy That Works)*”라는 제목의 문서로 대응했다.

⁷ 고대 그리스어 *ἑσπερος* / *hesperos*(저녁)와 라틴어 *vesper*(저녁)는 인도유럽어 어근 **wes-*(저녁/밤)에서 유래했다.

고유하고 따라서 상대적인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서양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 함의를 지닌다.

최근 역사를 거치면서, 한때 지리적 대립이었던 것은 이제 지정학적 의미를 띠게 된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그 원인과 흐름은 너무나 다양하고 모순적이어서, 원래의 대립은 이미 특정 지역이나 종교를 초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자주 인용되는 서양의 종교와 동양의 종교 간의 대비조차도 자세히 살펴보면 훨씬 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⁸

과학적인 서구와 비진보적인 동양 간의 구별 역시 한계가 있다. 지역과 문화권에 따라 이 대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실제로 관찰될 수 있으며, 종종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다른 대륙과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발명품은 동양에서 비롯되었으며, 철학 저작들은 아랍이 정복한 스페인을 통해 유럽에 전해졌고, 스페인은 16세기 이후 새롭게 부상하는 과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동양과 서양의 경제 체제를 구분하며, 후자에 높은 수준의 합리화를 부여했다. 개인적인 관계 대신 냉철한 가격 계산이 시장 활동을 지배했고, 이로 인해 생산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20세기에 들어 서구 산업화 국가들의 성공은 이 방향으로, 즉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⁹. 반면, 겉보기에는 멀게 느껴지는 동양(및 그 너머)의 문화에 대한 매혹은 유럽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상반되는 모든 경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대립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이나 건축 양식, 언어, 또는 관습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조의 일부를 수반하고 설명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으며 지리적 경계와는 이미 오래전에 분리되었다. 이는 인류의 실존적 질문과 철학이 제시하는 해답에 관한 문제이다.

철학과 정치

오늘날 우리가 철학의 요람을 고대 그리스로 지목할 때, 우리는 다양한 사상과 개념이 수많은 문화권에서 생겨났고, 어쩌면 논의되기도 했으나

⁸ 물론, 기독교-일신교적 서구는 역사상 특정 기간과 지리적 한계를 전제로 볼 때, 주로 힌두교와 불교가 지배적인 동구와 대조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와 페르시아의 일신교적 흐름이나 동양의 종교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서구 세계의 범신론적 흐름과 같은 반대 경향들은 배제해야 한다.

⁹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포하고 있으며, 개발이라는 목표는 당연히 경제적, 정치철학적 목표를 의미합니다.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사상의 흐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고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 전승될 때 비로소 역사적으로 실체화된다.¹⁰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들이 세계와 인류의 위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했던 방식은 그들에게 역사책 속의 영원한 자리를 보장해 주었다. 바로 이곳에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역사적 출발점을 찾으며, 바로 이곳에서 서구 세계의 철학적 토대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 이름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지중해 지역의 문화적 교류와 활발한 물물교환이 어우러져 실존적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리스 철학은 꽃을 피웠다. 호메로스가 전한 전설들은 이미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 용기 있는 사상가들은 오래된 질문들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길의 첫걸음은 자연과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원초적 물질과 원소에 관한 최초의 이론들이 등장하지만, 기술적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검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결국 단순한 추측 이상의 것이 남게 된다. 원자, 원소, 원초적 원리 같은 근본적인 가능성들은 현대 물리학이 등장하기 2,500년 전인 이 시대에 이미 정립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 철학의 두 번째 기둥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으로, 이는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역할 측면에서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지식, 올바른 삶, 공동체 내 공존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룬다. 따라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답론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¹¹와 윤리에 관한 질문들이다. 여기에서도 오늘날의 현대 이론들의 기초를 형성하는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리스 철학은 서구 문화의 핵심적인 지적 토대를 제공한다.¹²

¹⁰ 철학적 개념의 전통은 서로 독립적으로 많은 선진 문명에서 발견될 수 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또한 기원전 800년경부터 200년경까지의 시기를 "축의 시대"라고 지칭했는데, 이는 핵심적인 철학적 토대가 "이 몇 세기 동안 중국, 인도, 서양에서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거의 동시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역사의 기원과 목적』, 1949, 20).

¹¹ 여기서 정치는 인간을 'zoon politikon'(사회적 존재)으로 묘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따라 광의로 이해된다.

¹² 여기에 로마법의 원칙과 유럽에서는 유대-기독교의 영향이 더해집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유럽의 구성적 기둥으로 간주됩니다. 그리스-로마 고대의 종말은 종종 기원전 529년 아테네에서 플라톤의 아카데미가 폐쇄된 것과 연관되지만, 동시에 몬테카시노에 최초의 베네딕트회 수도원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유럽 중세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은 대항해 시대를 예고했다. 중세 말기, 고대 그리스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의 증가는 도시의 번영과 연결되었으며, 이러한 도시의 부는 과학과 문화가 꽃피게 했다. 유럽 전역에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자연과학의 출현으로 자연의 법칙을 해독하고, 미지의 지역을 탐험하며, 전 세계를 둘러싼 새로운 항로를 찾는 것이 점차 가능해졌습니다. 연구의 시작은 곧 기술, 의학, 일상용품 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러한 발전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진보와 그 결실은 그 이후로 사람들의 삶을 형성해 왔으며, 서구 생활 방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와 과학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비록 유럽-서구 문화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을지라도, 이론과 실천에 있어 세계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식이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일이 될 것임은 예견된다.

하지만 과학적 진보와 그 결실은 '서구적 정체성'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서구를 구성하는 핵심은 인간을 사적 영역에서 침해할 수 없는 자유의 권리를 지니고, 정치적·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개별 행위자로 이해하는 것이다. 국가 권력은 본질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에서 비롯되지만, 개인의 주권은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된다.

인간 본성에 대한 초기 성찰부터 그리스 철학과 계몽 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서구적" 이해에 이르기까지, 이는 수많은 모순과 좌절을 겪은 긴 한 여정이었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자유 지향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국가의 임무는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모든 정치의 민주적 기원을 확립하는 것이다. 법과 규정이 실제로 필요하며 법원과 당국 또한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구적" 국가는 느슨하고 구속력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헌법 국가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가 언제나 보호받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주권과 주권들: 궁극적인 정당성

서구는 인간 존엄성과 개인적·정치적 주권에 대한 앞서 설명한 개념을 철학적 개념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심지어 지정학적 패러다임으로서도 의존하고 있다¹³. 인간성에 대한 개념—그리고 그 궁극적 정당성—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질서가 인간 본성에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¹³ 해석과 이해를 위한 포괄적인 틀로서의 패러다임 개념은 이 경우 특히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과학적·이론적 차원(이 개념이 원래 유래한 곳—토마스 쿤, 1962 참조)뿐만 아니라 실존적, 실천적, 그리고 (지리)정치적 토대에도 닿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질서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될 것임을, 우리 우주의 본성에 부합하는 과학적 세계관이 우세할 것임을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신할 수 있다.

가장 흔한 반론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제기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주의 모든 과정은 물리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이는 모든 물체, 생명체, 그리고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심장 박동에서부터 뇌의 가장 미세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물리적이며, 마치 시계 태엽 장치와 유사하지만 생물학 분야에 속하는 길고 복잡한 인과관계의 사슬의 일부일 뿐이다. 인간에게는 미묘한 영혼도, 자연 법칙을 초월한 자유 의지도 없으며, 어떠한 종류의 존엄성도 확신할 수 없다. 과학적 연구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다.¹⁴

과학의 성공이 거듭됨에 따라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점점 더 많은 추종자를 얻고 있지만,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비록 그것이 물리학적 명제이자, 말하자면 수년간의 연구 결과라는 인상을 반복적으로 주더라도, 사실은 정반대이다. 물리적 세계관의 범위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문제이며, 따라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

여기서 간략히만 언급할 수 있는 철학적 논의¹⁵에서, 자유 의지와 인간의 의식을 신경 과정으로 환원하거나 윤리적 문제를 단순한 심리적 상태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자연주의적 관점은 도덕적·미학적 질문들을 무의미한 공허한 개념으로¹⁶, 그리고 인간의 정의 추구와 의미 탐구를 뇌의 복잡한 환각과 투영으로 거부해야만 한다. 뇌는 그 자체로 유기체를 통제하는, 궁극적으로 생화학적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극도로 복잡한 장치¹⁷이다. 따라서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아상은 필연적으로, 물리적 과정 외에도 인간의 정신, 존엄성, 자유에 기초를 제공하는 초월적 현실이 존재함을 전제한다. 덧붙여, 이는 세계의 물리적 구성에도 적용되며, 그 원인은 다시금 물리적일 수 없다. 궁극적으로 물리적 세계의 기원은 물리 이론이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이다.

¹⁴ 데이비드 루이스(1983, 361): "세상은 물리학이 말하는 그대로이며,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이 입장은 유물론, 실증주의, 경험주의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본질적으로는 항상 동일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¹⁵ 이 에세이의 별도 서문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

¹⁶ "실증주의적 이성"이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그 분야를 지배할 때... 윤리와 법에 대한 고전적인 지식의 원천은 배제된다" - 2011년 9월 22일 독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베네딕토 16세.

¹⁷ 설령 우연의 일치라 할지라도 뇌 기능의 일종의 프로그램화된 순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며, 단지 몇 가지 예측 불가능성을 통해 그 순서를 "완화"시킬 뿐이다.

요약하자면, 칸트가 제시한 바와 같이¹⁸, 인류의 위대한 실존적 질문들은 물리학의 해석 범위를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은 매우 직관과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심지어 그 추종자와 옹호자들조차도 일상생활에서 마치 자신의 자유 의지로 윤리적 결정을 내리거나 과학을 수행하며 세상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담론이 복잡해질수록, 신경학적 프로그램만이 담론의 흐름과 상호작용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더욱 터무니없어 보인다.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철학적 또는 종교적 개념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와 의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실존적 질문들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는, 초월적인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서구적 인간관" -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¹⁹ - 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인간관, 나아가 현실 전체에 대한 관점을 전제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여러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자유롭게 고르는 의미에서의 임의적인 선택 문제가 아니다. 사실, 주어진 현실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곳에 있다. 그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 그리고 그에 대한 논쟁이 아무리 격렬하든 간에 -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현실은 궁극적인 타당성이며, 그 무엇보다 우위에서 있다: 절대자의 주권이 지배한다.

다중적 단절: 진화와 혁명 사이

언뜻 보기에, 위에서 개괄한 서구의 개념은 현실보다는 정치적·종교적 유토피아의 영역에서 비롯된, 모호하게 구성된 사회 모델처럼 보인다. 따라서 비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존엄과 권리, 주권을 지닌 인간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 실제로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자유로운

¹⁸ "철학의 영역은 [...]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요약될 수 있다: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3)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4) 인간이란 무엇인가?" (순수이성비판, B833, 1787) - 1897/98년,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은 이와 유사한 근본적 질문들을 담은 그림에 제목을 붙였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¹⁹ 새로운 것에 대한 능동적 지식, 연대나 가치, 윤리 및 미학에 대해 논하는 이데올로기와 과학들 또한 초월적인 참조점을 가리킨다. 그들에게, 그리고 서구적 생활 방식의 많은 대표자들에게 이 연결고리는 대체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무관해 보인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은 미리 정해진 사건의 사슬 속에서 자신을 잃게 될 것이며, 소위 정신이라 불리는 것은 심리적 환상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이는 과학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을 우스꽝스러운 꼭두각시로 전락시킬 것이다.

사회 질서가 올바른 개념이라면, 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저절로 우세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는가?

언뜻 보기에 이 반론은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면 이는 명백해 보인다. 과학의 길은 종교와 정치의 영향을 산발적으로만 받으며 비교적 순탄했던 반면, 실현 가능한 사회 형태를 찾는 과정은 번덕스럽고 때로는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왜 그 길은 이토록 험난한가?

그 해답은 다양한 공백, 좌절, 지속성, 그리고 역류 현상, 즉 광범위하게는 ‘과단(disruptions)’으로 요약될 수 있는 요소들에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한 시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을 지니며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

- 일시적인 혼란: 모든 문화권에서 자유주의적 입헌 국가의 초기 단초를 찾아볼 수 있지만, 고대 그리스와 같은 초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가의 발전은 비교적 근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일반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권한과 주권을 깨닫게 된 19세기와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힘을 얻기 시작했으나, 그 과정에는 잘 알려진 장애물과 좌절이 수반되었습니다.
- 공간적 단절: 서구적 가치가 세계의 한 지역에서는 자리를 잡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 체제가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주권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일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성숙도에 대한 깨달음의 결여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발전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세력들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
- 시간적 단절: 비록 자신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요소이긴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한때 고된 노력을 통해 달성된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복고주의적·반동적 운동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다. 서구적 가치와 그에 수반되는 번영이 전 세계적인 매력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발전은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대한 역풍은 유럽의 파시즘 시대, 특히 독일의 나치즘이었다.²⁰

²⁰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전후 독일에서 시작된 민주적 재편을 “경제적·정치적,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문화적 과정으로, 문화적 서구화가 전체 국민의 사고방식에 스며들어야만 비로소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1989년 7월 바바라 프라이타그와의 인터뷰에서).

- 개인적 혼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애착은 일반 시민과 정치 지도자 모두에게서 다양한 수준에서 약화되어 정반대의 태도로 변할 수 있다. 사회·경제·정치적 발전에 대한 불만조차도 인간 공존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을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언제나 전반적인 사회적 후퇴의 위험을 동반한다.
- 문화적 혼란: 스스로를 자유롭고 민주적이라고 여기는 사회들을 살펴보면, 국경 내에서도 국가의 기초가 되어야 할 근본적 가치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될 개별 법률이나 정치적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 정치, 종교, 문화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국가 간에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이해에는 다소간 차이가 존재한다.²¹
- 전략적 단절: 팽창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세력으로부터 자유 세계를 방어하고 군사 기지, 원자재, 동맹국 등 자국의 존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가치관과 상충하는 내부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 반복적으로 전략적 동맹을 맺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는 명백하며, 시민과 정치인 모두에게 위협한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²² 이는 평등과 영구적 공존의 정당성에 대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법치에 기반한 자유주의적·민주적 원칙의 발견과 실현을 문화마다 서로 다른 전제 조건을 가진 점진적 발전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애초부터 그러한 차이를 예상해야 한다. 비록 역사 전반에 걸쳐 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향하는 혁명적 움직임이 반복되어 왔지만, 역사적 과정은 본질적으로 진화적인 성격을 띤다.

지정학과 비전

초월성을 수용하는 세계관의 틀 안에서 위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인류애의 개념이 실제로 현실과 부합한다고 가정할 때, 가능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²¹ 물론, 한 사회가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현실에 발을 단단히 디딘 평균 소득의 중년 성인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가치는 청년, 노인, 사회적 약자 집단의 처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도소, 군대, 기타 기관 및 권력 기관의 상황에서도 드러난다.

²² 수천 년 동안 알려져 온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전략적 원칙은 실존적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있겠지만, (권력) 정치적 결정의 윤리적 토대를 대체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념이 역사를 통해 우세해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20세기에 이미 가능했는데, 당시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단순한 철학적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과 부합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²³ 실제로 1990년대에는 수많은 민주화 과정과 평화 구상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국제적 갈등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세계적 내정(global domestic policy)"²⁴의 출현을 예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이 각자의 속도와 조건에 따라 민주적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미지는 정반대의 현실에 의해 뒤처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유 세계"의 국가들²⁵와 나란히, 권력을 유지하거나 정치적·종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필요하다면 단결하여 서구 세계에 대항하는 수많은 독재 정권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만간 자유로 가는 길이 생길 것이며, 실제로는 반드시 생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은밀히 의심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통찰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저항한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현실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상반된 원칙: "두 세계"

국제 정치 무대²⁶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와 자유 국가 사이에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인 성격의 증대한 갈등이 존재한다. 그 원인은 사회적 공존에 대한 상반된 관점에 있다.

민주주의 세계에서 국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의 유일한 정당성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주권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침해할 가능한 한 막아내는 데 있다. 자유 사회에서 국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더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며 대안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신의 자유를 정당화해야 하는 것은 시민이 아니라, 개입을 정당화해야 하는 것은 국가이다.

권위주의 및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 원칙이 역전된다. 종교적, 정치·이데올로기적, 혹은 개인적 근거에 상관없이 국가와 그 정치 지도부가 주권자이다. 개인은—아직 그런 존재를 말할 수 있다면—모든 면에서 이

²³ 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89년,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주권을 요구했고 이것이 보편적인 요구임이 명백해졌을 때 이미 "역사의 종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²⁴ 각주 4 참조.

²⁵ 이 대안적인 용어 역시 동서 갈등 이후 역사적으로 무거운 의미를 띠고 있다.

²⁶ 이 은유적인 용어는 연극을 연상시키지만, 수백만 명이 목숨과 존엄성을 잃고 수십억 명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냉소적으로 보입니다. 자원의 파괴는 전 지구적 규모로 일어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 흔적을 남깁니다.

국익(raison d'état)에 종속된다. 물론 점진적인 차이는 존재한다. '온건한' 독재 정권은 경제 및 사회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정치적 비판만을 탄압할 수 있는 반면, 전체주의 정권은 사람들의 사상과 존재 자체를 임의로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결국 개인은 집권 정권에 맞서 무력하며, 권리나 존엄성을 주장할 수 없고, 행동의 자유는 위에서 부여받은 것이므로 언제든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존재적 위험은 그들의 삶 전체를 뒤따르며, 사회적 공존을 - 때로는 개인의 인격까지 -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왜곡한다. 국익, 즉 정권의 생존은 인간의 존재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다.²⁷

국제적 차원

권위주의 국가들의 이러한 우선순위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반영된다: 모든 노력은 집권 정권의 존속과 권력 확보를 향해 집중되며, 그 외의 모든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목표는 이 노력에 종속된다. 권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미 인권과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내부적으로 제한되거나 무시되거나 탄압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가치들은 정권에 대한 실제적 또는 지각된 위협에 대항하는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재 정권의 국제 관계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다른 체제들로부터 온다. 이들은 자국민의 주권도 타국의 주권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힘의 원리가 적용되며, 대외적 폭력은 항상 정권의 존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며, 생존을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다.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동맹은 종종 불확실하며, 자신의 존재는 끊임없이 위협에 처해 있다.

억압적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 내부의 - 위협은 바로 그들 자신의 시민들이다. 이들은 억압에 저항하고 개인적·정치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비록 민주주의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억압받는 민족들을 지지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긴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대개 연대의 표명과 결의안 채택에 그친다. 무력 개입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적극적인 지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다.

자유 세계는 독재 정권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을 맺을 수 있지만, 억압받는 민족을 돕기 위한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협상, 이해, 그리고 선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군사력이나 정치적 압력 사용을 꺼린다. 게다가 외국

²⁷ 실제로, 이러한 용어들은 노동 수용소와 학살 수용소, 고문 센터, 억압,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잔혹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가장 깊은 실존적 심연입니다.

개입이 국민들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정치 지도자들이 지원을 철회해야 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새로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 분위기가 바뀌고, 심지어 역사적인 동맹조차도 끝날 가능성이 있다.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정치 지도부가 주권자인 시민의 의지에 의존한다는 점은 자유 사회의 핵심적 특징이다. 동시에 이러한 투명성과 개방성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축에 있어 취약한 측면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수준에서 정치적 선전을 통해 여론과 투표 행태를 조작하고, 통제된 위기를 통해 해당 사회를 교란하려 시도한다. 그 수단은 허위 정보의 고의적 유포부터 국경에서의 이민 압력 조성, 군사적 도발 및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권위주의 축에 반대하는 개별 시민과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더해져, 이들은 언론이나 물리적 폭력의 표적이 된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수준에서 광범위한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그들이 전 세계적 자유를 보존하고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꺾는 것이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권력과 영향력의 요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보다, 권위주의 국가들이 평화로운 공존을 원하며 잠재적으로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²⁸ 게다가 자유 세계, 즉 '글로벌 서구'의 원칙들은 끊임없이 오해받고 희석되고 있다.

서구의 공리

세속적·종교적 이데올로기와는 대조적으로, 서구는 일정한 절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종말론적 패러다임, 경제 계획 시나리오, 유토피아적 사회 모델이 결여되어 있다. 자유와 존엄을 누리는 삶에 대한 약속은 사실상

²⁸ 냉전 기간 동안의 소위 "평화적 공존"에 대한 언급은, 당시 동시에 일어났던 갈등들만을 고려하더라도 기만적이다. 초강대국 간의 핵 교착 상태가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화적 공존은 소련의 변화와 동유럽의 격변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적 공존은 독재 정부와 억압받는 시민들 사이의 강제적 내부 공존만큼이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내용이 빈약해 보인다. 사실, 이는 몇 가지 근본적인 측면과 구조에 관한 것이다.²⁹ 서구의 자유는 또한 공리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

1. 절대의 주권: 개방적-초월적 토대

이러한 현실관은 인간 본성과 정치적·과학적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이다. 오직 이 토대 위에서만 다양한 이념적·종교적 참조점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실존적 측면들을 논의할 수 있다. 이념적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담론은 서구의 필수적인 핵심이다.

2. 개인의 주권: 자신의 삶을 형성할 권리

인간 본성과 존엄성은 현실에 대한 초월적 이해에 기초한다. 이러한 인간관은 개인에게 자신의 삶을 형성할 주권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낳는다. 인간 존재의 이러한 실존적 핵심은 근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다: 개인의 주권은 민주적 결정 속에서도 침해될 수 없다.

3. 국민 주권: 사회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한다

공동체의 정치적 규정은 민주적 기원을 가져야 하며, 즉 선거와 국민투표에 근거해야 한다. 사회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개방적이다. 국민 주권은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주권을 반영하며, 두 주권은 상호 의존적이다: 개인의 자유가 정치적 참여를 통해 실현되듯이,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성숙한—따라서 자유로운—시민들에 기반을 둔다.

4. 이해관계의 조직이 아닌 가치를 통한 연대

모순되고 변하기 쉬운 주관적 이익을 바탕으로 연합한 권위주의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서구의 지적 토대는 가치와 존엄성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 더 깊은 객관적 현실에 내재되어 있어 가 실제로 적용되는 초월적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러한 철학적 대조는 가장 격렬한 정치적 차이 앞에서도 결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서구 국가들 간의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권위주의적 팽창에 맞서 함께 맞서는 것 또한 포함된다.

5. 지성학적 비전: 보편적 서구

²⁹ 이는 자유로운 입헌 국가에서 그 장단점을 모두 안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관료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념적 '프로그래밍'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서구’ 프로젝트는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공존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과도기적 조치에 국한되는 보편적 프로젝트이다. 만일 보편적 인간 존엄과 권리의 타당성을 모든 사회의 기초로 받아들인다면, 이를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악이다. 권위주의 체제는 그 본질상 지속 가능한 존재가 불가능하므로 그 존재 기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보편적 서구’가 서구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는 내재적 관심사³⁰ 인 이유이다.

국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이 결여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현실에 대한 철학적 토대와 의 모순으로 인해, *권위주의 정부는 이러한 상호성의 부재로 인해 기껏해야 제한된 주권만을 가질 뿐이다.*³¹

진정한 현실정치, 즉 지전략적 조건과 더불어 항상 인간의 조건을 행동의 기초로 삼는 정치적 입장은 이러한 연관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것은 먼 미래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여기서 서구의 공리로 제시된 기초 위에서만 변성할 수 있다.

에필로그: 다가올 25년을 위한 세 가지 격언

동서 갈등의 종식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구석에 적어도 잠정적인 빛을 비추었던 희망찬 초기 시절을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지역에서 국제 정세가 어두워졌다.

국제적 차원에서 지난 세기의 체제적 갈등이 변형된 형태로 재현되었다. 억압적 정권들의 축이 권위주의적이거나 무관심한 국가들의 네트워크와 결탁하여, 자유 세계에 대항하는 반동 세력을 구축하고 이를 점차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역사적 도전에 직면하여, 서구 세계는 오랫동안 방어적 전략을 고수해 왔으며, 군사적·정치적 차원은 물론 철학적 토대 측면에서도 권위주의의 물결이 가져오는 점점 커지는 위협을 외면해 왔다. 이러한 침식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러 국가 내에서 권위주의적 경향이 대두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연대를 포함한 상호 협력 관계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³⁰ 1990년대의 경제 및 통신 기술 세계화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철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엄성의 세계화이다. 이는 인류의 민족적 다양성이 사라져야만 하는 획일적인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³¹ 독재 정권의 전복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당성이 일시적으로 민주적 절차 밖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언제나 개인의 주권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이 역사적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자유주의 운동의 기초로 근본적으로 회귀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억압적인 침략자의 위협을 받는 자유 사회가 싸우지 않고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절실하다. 자유의 힘은 정치적 조작과 군사적 탄압을 넘어선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역사는 자유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그 위력을 발휘할 것임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것이다. '자유 세계'라는 개념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이는 권위주의 체제가 이를 억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필수적인 대립물인 억압의 물결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사라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십 년간의 과제는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철학적 토대와 그 정치적 귀결로의 회귀

20세기의 철학적 정통성은 이제 많은 경우 무관심과 상대주의로 대체되었다.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다양해진 상황에서, 평범한 일상적 정치 문제조차 종종 엄청난 난제로 변해버렸다. 이는 자유 세계의 기초를 찾는 일이 오늘날 더욱 무의미해 보이게 만드는데, 이는 사람들이 용인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논의해서는 안 될 철학적 또는 신학적 측면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망감은 필연적으로 관점의 상실을 초래하고, 나아가 의미의 위기로 이어지므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자유로운 개인과 국가의 존재의 출발점인 개인의 존엄성은 필연적으로 현실에 대한 초월적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 토대는 - 적어도 그 핵심적 측면과 결과물에서 - 정치적 행동의 중심에 놓여야 하며, 어느 정도는 궁극적으로 그로부터 존재의 근거를 얻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자리 잡아야 한다.

2. 자유 세계 공동체 내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자유 세계의 지정학적 방향성과 상호 안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국가가 자유 세계의 동맹에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탈하거나 이를 의심하게 될 위험이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이러한 변수는 모든 수준에서 미리 예상하고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언제든지 기존의 가치 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선택하도록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체의 해체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국가 간 동맹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더 강력한 보호가 바람직할 것이다.

가치관의 동맹으로서 자유 세계는, 하나의 주요 안보 보장국이나 여러 소규모 안보 보장국이 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비해 스스로를 무장해야 한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예비 역량 외에도, 가능한 한 탄력적이고 개별 국가의 단독 노력에 좌우되지 않으며, 권위주의적 네트워크의 공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안보 체계를 필요로 한다.

3. 자유를 위한 역사적 승리를 인식하며 국제적 차원에서 자유 세계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헌신

상호 안보의 목표는 좁은 의미의 국익 차원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후퇴 없이 자유 세계의 역사적 성취를 보존하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편적 주장을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글로벌 서구의 방어는 궁극적으로 언제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국익에 부합한다.³²

따라서 글로벌 서구의 국가들은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자유라는 이념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자국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권위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반대를 명확하고 모호함 없이 보여줘야 한다. 철학적 차원에서 볼 때, 독재 정권의 존재는 절대적 진리⁽³³⁾에 대한 모욕이다. 그들의 통치와 성취는 상대적이며,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구체화될 수 있는 한 *가짜 철학*에 불과하며, 그 장기적인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완전한 무(無)로 끝날 것이다. 진리 앞에서 그들의 권력자들의 모든 영광은 언젠가 흠먼지가 될 것이며, 단,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는 지도자들만은 예외일 것이다.

³⁴앞서 언급된 격언들은 유토피아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며, 외교, 지정학, 현실 정치(realpolitik)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우선 전통으로의 일관된, 단지 반쪽짜리가 아닌 회귀를 요구하며, 그 다음으로 21세기에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불확실성으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한다. 궁극적인 목표가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사실 - 그리고 그것이 결코

³² 인권과 기본 가치에 기반한 정책은 기아, 고난, 억압을 외면할 수 없으며, 분쟁 해결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물론 실제로 어떤 행동 방안을 선택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³³ 근본적인 이론적·실천적 방향 상실을 겪고 있는 정권의 비현실성을 더 간결하게 묘사할 방법은 찾기 어렵다.

³⁴ 여기서 현실정치(Realpolitik)는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술책이 아니라, 초월적인 현실을 포함한 현실과 그 함의를 인식하는 포괄적인 정치 양식으로 이해된다.

모든 이를 위한 자유로운 세계나 *보편적인 서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은 지난 300년 간의 인권 선언들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³⁵

© 20세기 연구 프로젝트 – 글로벌 서구의 철학

추가 정보 및 연락처:

20세기 연구 프로젝트

www.20th-century.net

글로벌 서구의 철학

www.theglobalwest.com



www.steff.international/CONTACT/

- 버전 1 / 2026 -

³⁵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언급하는 반면, 그 선구자인 미국과 프랑스의 선언들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언급하는데, 이들 각각은 비실증주의적 토대를 암시한다.